

민주 “축소·은폐·조작 용서 안돼... 고위직들 책임져야”

이태원 헬리콥터 참사... 112 녹취록 공개에 “막을 수 없던 참사 아니다”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행안장관·경찰청장 파면, 시장 사퇴 요구 봇물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 2년째인 2일 정부 책임론을 고리로 대역(對換) 공세에 날을 세웠다. 참사 직후부터 조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정쟁을 자제해왔지만, 전날 공개된 경찰의 '112 신고 녹취록'을 계기로 축소·은폐 의혹까지 제기하며 강공 모드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한덕수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 및 사법처리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책임론과 관련, '선택과 집중'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분별하게 전선을 확대해가는 본질이 희석되고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정부의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하는 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는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12 신고 녹취록'을 언급하며 “막을 수 없던 참사가 아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대통령, 총리, 장관 등 누구 하나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다고 옳다고 사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책도 참사 축소나 회피가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방향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은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축소·은폐 의혹까지 포함해 사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태 최고위원은 “무대책 서울시를 만든 오세훈 시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대표는 전날 한 총리의 외신 기자 간담회를 거론하며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총리께서 간담회를 하며 농담을 했다. 농담할 자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간담회 중 한 총리의 웃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을 들고 “도대체 이 사람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냐”며 “까만 리본을 달고 웃는 이 모습,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국무총리가 당일 사의 표명을 했다”고 언급하며 한 총리의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진보단체의 반발 움직임을 담은 경찰 정책 참고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거부했다며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을 가로막았다면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이야기까지 나왔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브리핑을 통해 “112 신고 목적은 부실 대처의 방산의 일각

일 수 있다. 전면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 조사) 미흡하다면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지자체, 지역민 안전장치 강화

“주최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대상” 조례·규칙 등 대대적 정비

광주시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 전반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 사·도의회에 따르면 시 소관 전체 자치법규 1106개 중 안전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타 지자체 등 선진 자치법규와 비교·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해 개정 대상을 발굴한다.

시 자치법규 개정만으로 안전장치 보완이 어려

운 경우에는 정부·국회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이태원 참사 사례처럼 주최자가 없는 다중모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우선 개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기존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항목에 '압사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사·도의회도 안전 강화 자치법규 정비 등에 힘을 보탠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비례)은 이날 입법정책실에

“광주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에도 압사 등 인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도의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욱(더민주·목포 3) 의원 대표 발의 형태로 “전남도 다중모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라도 전남에서 3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념일 또는 특정일의 공연 및 집회, 가두행진, 축제, 체육행사 등 다중이 운집하는 육내의 행사의 경우 전남도와 관할 시장·군수,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해 계획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사위,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다투다 파행

“보고만 가능 질의는 안돼”...野 “이율배반적 모습”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질의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파행을 거듭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법제처·감사원·내외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회의 시작 전 여야 간사가 이태원 참사 관련 법무부의 현안 보고 및 현안 질의와 관련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대검찰청 사과대책본부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 등의 활동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데는 합의했지만, 이후 질의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여당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파행 직후 여야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의사일정 협의의 과정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

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는데,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라며 “여당이 말하는 초당적 협력은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에서 “현안질의는 소관 상임위원 행안위에서 해야 하지만, 법사위 현안질의를 오는 8일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정어로 삼으려 고하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은 부처가 없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고 사망자” vs “참사 희생자” 공방

국회 운영위, 정부 표현 설정

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어떻게 명칭돼 있는지 아

나.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인권위가 정부에 조지를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참사 희생자” 표현 대신 ‘사고 사망자’ 등 정부의 모든 지침과 발언 등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태도,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지

체가 이런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 국민이 오히려 오히려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발언해 이미 참사라는 용어를 썼다”고 반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 합계 →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 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소규모합병 공고

현대개발(주)는 (주)호남이스콘과 2022년 10월 27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 제 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합병방법: 현대개발(주) (주)호남이스콘을 흡수합병함
- 합병비율: 현대개발(주): (주)호남이스콘 = 1:0 (현대개발(주)는 (주)호남이스콘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인수발령이 없는 무증자합병임)
- 소멸희사의 현황: 가. 상호: (주)호남이스콘 나. 본사소재지: 충남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158
- 합병일자: 2022년 12월 15일
- 본인 합병은 합병 제 527조의 3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갈음함

2022년 11월 3일
현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철수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태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여 영구 또는 영구안은 영구기간 만료 신고하기 위하여 만안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영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분묘소재지: 전남 장안군 마백면 수안리 488
- 분묘의 개수: 1기
- 개장 사유: -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묘의 처리
- 개장 방법: -유연묘: 영묘기간 합의 개장 -무연묘: 영묘기간 경과 후 관계 당국에 의거 영묘개장
- 개장 후 안장 장소 및 기간: -안장 장소: 송남권산관 추방면 서해로길 100 사대산 추모공원
- 공고기간: 2022년 9월 23일 - 2022년 12월 22일 (최소 공고일 날로부터 3개월)
- 신고 및 문의사항: -공고 일: 정애지 (010-9885-7648) -신고처: 장진도발령부 (010-3130-1740) -업무대행: 장진도발령부 (010-3130-1740)
- 현장 확인을 위하여 총화료 130-2
- 신고시 구비서류: 영묘기간을 증명하는 책표, 제작등본, 기원, 사실행사 등
-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11월 3일
공고인: 정애지 (010-9885-7648)

정정공고

본보 2022년 11월 2일자에 게재된 합병 및 주권계승공고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완도씨(이)하(감)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만스폰(이)하(유)이라 한다)의 공고중 (주)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완도씨(이)하(감)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완도씨)로 정정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70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내: 동광 266-1920, 문동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광산 571-7658, 오지 266-7601, 용평 433-1503, 유선 433-1503
- 동구: 남광 673-6836, 동흥 222-9054, 동흥 225-6001, 동흥 222-9054, 송정 222-9171
- 남구: 남부 673-6836, 백운 651-1833, 신 673-6836, 송하 675-6605, 신원 671-7276
- 서구: 광천 382-5798, 상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문선 376-7153, 치평 376-6511, 동암 603-0311, 화정 369-1625
- 광산구: 운남 952-1687, 월곡 959-1920, 청원 973-2900, 하남 955-0451, 광산 944-0444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약 220-0550

산행안내
11월5일(토)
▲광주호신회 11월5일(토) (영주 정남대 국화축제 및 대룡령 단풍 트레킹) 오전 06시 3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7시 롯데대회점 07시15분 문화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신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